IBK경제연구소 | 경제분석팀 연구위원 장우애(☎02-729-6811, wooae78@ibk.co.kr)

중국내 反韓감정 확산과 영향

참! 좋은 은행 IBK기업은행 | IBK경제연구소

목차

[Executive Summary]

Ⅰ. 중국의 反韓감정과 경제보복 ····· 1

Ⅱ. 일본사례 분석 ····· 7

Ⅲ.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 11

※ 본 자료는 IBK 경제연구소가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작성한 연구 자료이며, 어떤 경우에도 법적 책임소재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Ⅰ 중국의 反韓감정과 경제보복

1. 중국내 反韓감정

□ 최근 중국 언론사들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약 90%의 중국인들이 한국에 대한 제재조치를 지지한다고 응답

○ (환구시보) 사드결정 이후 '사드를 배치하는 한국을 제재해야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88.3%(1만 444표)가 찬성입장을 밝힘

○ (신경보) 한한령에 대한 찬반여부를 묻는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87%(약 28만표)가 "조국 앞에 아이돌은 없다", "다시는 '습니다'를 듣고 싶지 않다"는 반한감정을 드러내며 찬성입장을 밝힘

○ 韓·中 관계는 일견 우호적으로 보이지만, 反韓감정은 비교적 감정적 골이 깊은 상태

- 양국은 동북공정('02년 추진된 중국 동북 3성 역사 프로젝트)으로 고려사 해석을 두고 갈등을 겪어 왔으며,
- '08년에는 쓰촨성 대지진 인터넷 야유 및 SBS 베이징 올림픽 리허설 사전 유출 등으로 한국 선수단이 베이징올림픽에서 중국관중의 최대 야유를 받기도 함

2. 중국의 경제보복 조치

□ 이미 강도 높은 경제보복을 시행하고 있지만, 보복조치가 공식화 되고 대상범위의 확대 가능성도 적지 않음

○ 대부분 비공식적 보복조치이나 표면화된 사례도 일부 탐지

구분	보복조치	시행여부	비고
여론전	여론압박	○	
인적교류 제한	비자발급 제한	○	
	유커(중국 관광객)의 訪韓 통제	△	비공식
기업규제	한한령(限韓令) 등 콘텐츠 규제	○	비공식
	한국제품 차별	△	부분적
	한국기업 세무조사 강화	△	부분적
	차이나머니 회수	△	부분적
	비관세장벽 확대	X	

2.1 여론전

□ 여론압박

○ 7월 8일 사드배치 결정이후, 약 한달 동안 중국 외교부와 국방부는 27건의 반대논평을,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는 265건의 비난보도를 게재 * 중앙일보 언론사설중

- '92년 수교 이후 이런 언론의 집중포화는 처음이라는 평가

2.2 인적교류 제한

□ 비자발급 제한

○ 중국은 8월 2일부터 중국정부 및 기업으로 받은 초청장*에 한해서만 상용비자 발급을 허용

* 상용비자는 사업 또는 시찰, 과학기술·문화·교육·체육 교류 등을 목적으로 중국을 방문할 때 필요한 비자로 비자발급시 초청장이 요구되나 기존 초청장 대행업무를 담당하던 여행사 및 대행업체의 초청장을 불허

□ 유커의 訪韓 통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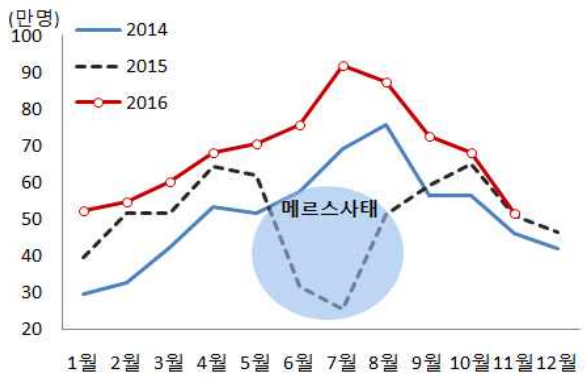
○ '16.10월, 일부 지방정부*에서 유커(遊客)의 한국방문 20% 감축령이 내려졌다는 보도가 잇달음 * 상하이, 장쑤성, 저장성, 안후이성, 산시성 등

- 실제로 10월부터 방한 중국인 관광객 증가율이 큰 폭으로 둔화됨

※ 중국인 관광객(전년동월대비, %) : 32.4('16.1) ⇒ 22.8(9) → 4.7(10) → 1.8(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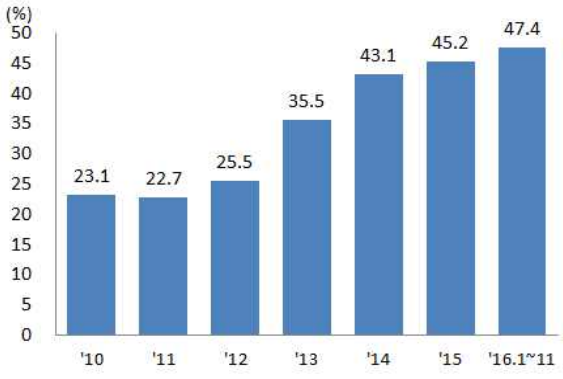
○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의 거의 절반이 중국인으로 중국 정부의 유커 통제는 한국입장에서 큰 타격일 수밖에 없음

관광객수



: 한국관광공사

방한 외국인중 중국인 관광객 비중



자료 : 한국관광공사

2.3 기업규제

□ 한한령(限韓令) 등 컨텐츠 규제

○ 공식적인 규제는 아니나, 한국 드라마·영화·TV 방영, 한국 연예인의 TV 출연·공연·광고 등을 전면 금지하는 조치가 취해진 것으로 알려짐

구분	한한령 의심 사례
방송	- 중국 4대 방송사(호남, 저장, 동방, 장쑤)의 '17년 드라마 편성표에 한국 드라마 편성은 0건 - 황치열, 중국판 '나는 가수다'에서 통편집('16.8월) - 싸이, 음악예능 '더 리믹스'에서 모자이크 처리('16.8월) - 유인나, '상애천사천년 2' 촬영을 2/3 이상 마친 후 돌연 교체 통보('16.8월) - '푸른바다의 전설' 중국 방송심의 탈락('16.11월) - '사임당 빛의 일기' 중국 방송심의 탈락('16.11월)
공연	- '16년 10월 이후 1만명 이상 대규모 공연 승인 0건 - 백건우, 중국 오케스트라 협연 취소('17.1월) - 조수미, 2년전 중국측 초청으로 열릴 예정이었던 순회 공연(광저우, 베이징, 상하이) 돌연 취소 통보('17.1월) - 발레리나 김지영, 중국 공연 취소('17.2월)
광고	- 중국 스마트폰 VIVO는 6개월도 지나지 않아 광고모델을 송중기에서 펑위엔으로 교체('16.11월) - 중국 화장품 업계도 한국인 모델 교체를 검토 ※ 송중기(프로야), 김수연(한허우), 송혜교(쯔위안), 안재현(훠치안) 등

○ '14년 기준 콘텐츠산업 지역별 수출액을 보면, 일본(16.0억달러, 비중 31.2%)에 이어 對중국(13.4억달러, 비중 26.2%) 수출이 2위를 차지하고 있어 금전적 손실이 클 것으로 예상됨

- 한한령 외에도 게임산업은 對중국 콘텐츠 수출의 71.4%를 차지하고 20조원 규모(전세계 게임시장의 1/3 규모)의 중요한 시장이나,
- '16.7월 중국이 '판호(版號)*'를 권고에서 의무로 변경하며 對중국 수출에 비상이 걸린 상황

* 판호란 중국 광전총국이 승인한 중국 현지 게임 서비스 허가권을 말하나, '16년 기준 판호를 발급받은 한국게임은 13종(외산게임의 5.7%)에 그침

○ 한한령이 혐한(嫌韓) 분위기로 확산되는 것도 큰 우려요인

□ 한국제품 차별

○ 수입 인증강화 및 수출입 통관지연 등 일부 제품에 대해 한국의 對중국 수출에 대한 보이지 않는 규제강화가 의심됨

○ **(화장품)** 한국(23.7%)은 프랑스(29.3%)에 이어 중국의 두 번째 화장품 수입국으로 화장품에 대한 수입규제 강화는 한국에 대한 경고성 조치의 일환으로도 추론 가능함

- 최근 ①화장품위생규범 개정하고('16.12.1일) ②해외직구 화장품에까지 위생허가 범위 확대('17.5.1일) 하며 對중국 수출장벽을 높임
- 뿐만 아니라 '16년 들어 중국 관영매체들의 한국 화장품 폄하 보도가 늘어나고 유독 한국의 수입통관 불합격 건수가 많아지는 등 한국제품만 차별하는 보복조치가 의심되는 상황(8월 한달에만 61건이 불합격 처리됨)

< 수입통관(·화장품) 불합격 국가별 순위(단위 : 건) >

국가	'16년		'15년		'14년	
	순위	건수	순위	건수	순위	건수
대만	1	746	1	746	1	808
한국	2	219	4	130	3	264
미국	3	208	3	159	2	273
일본	4	188	2	173	5	145
프랑스	5	137	5	101	4	226

: 순위는 '16년 기준, 자료 : 중국국가질검총국, 무역협회 북경지부 재가공

○ **(전기차 배터리)** 중국정부의 한국업체에 대한 노골적인 차별 심화

- LG화학과 삼성SDI는 '15.11월 1차 전기차 배터리 모범규준에 탈락한 이후 '16.6월 4차까지 인증을 받지 못한 상태
- '16.8월 예정된 5차 심사마저 특별한 이유 없이 심사일정을 미루고, 심사기준을 강화
- 또한, '16.12.29일 중국 공업화식신부에서 발표한 '신에너지 자동차 보조금 지급차량' 목록에서 한국업체의 배터리를 장착한 5개 모델을 제외
- 현대·기아차는 배터리 인증을 기다리든지 중국산 배터리로 교체하는 방법밖에 없으나, 배터리교체에 따른 설계변경만 1~2년이 소요될 전망
- 현대 쏘나타의 경우 중국업체로 배터리를 교체 결정('17.2.8일)하고 출시를 연기

□ 한국기업의 세무조사 강화

○ ’16.12.1일 중국정부가 사드 부지를 제공했던 롯데그룹의 중국 전 사업장에 대해 세무·소방·위생·안전 점검*에 나선 것으로 확인됨

- 상하이 롯데 중국본부는 설립 4년만 구(區)단위가 아닌 상하이시가 직접 조사하는 최대 규모의 세무조사를 받았으며, 롯데제과, 롯데케미칼, 롯데백화점 등 10여개 계열사에 대해 동시다발적 조사가 이루어짐
- ’17.2.7일 중국정부는 3조원 규모의 선양의 ‘롯데타운 프로젝트’를 소방점검 사항을 문제 삼아 공사를 중단

□ 차이나머니 회수

○ **(상장주식)** 사드배치 결정 이후 8월부터 외국인의 주식 순매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중국인의 주식 투자는 5개월 연속 감소

※ 중국인 주식 순매수(십억원) : △177(’16.8) → △168(9) → △206(10)→ △129(11) → △106(12)

- ’16년 연간 외국인 주식투자도 순매수가 증가했지만 중국인 투자는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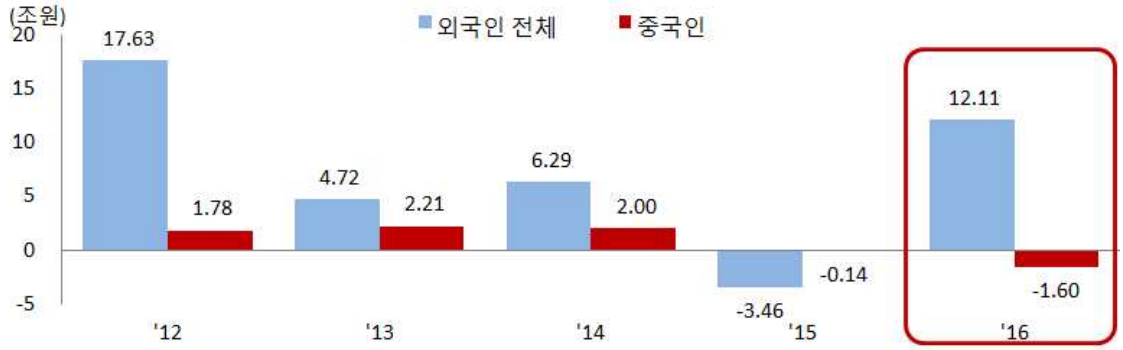
○ **(채권투자)** ’16.4월부터는 국가별 채권거래 규모를 확인할 수 없지만*, ’16.3월말 기준 상장채권 보유액은 17.9조원으로 외국인투자자중 1위국이며 상장주식(8.9조원)의 두 배를 보유하고 있어 차이나머니 유출이 우려됨

* ’16.4월부터 국가별 상장채권 거래 및 보유현황은 공시하지 않음

- 만약 채권시장에서 차이나머니 유출이 심화된다면 국내 시장금리 상승 등 그 영향은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됨

○ **(VC투자)** ’16.12.21일 상하이 시영투자기관 ISPC(International Sourcing Promotion Center China)는 투비소프트에 1억달러 규모의 사모펀드를 조성하는 투자합의각서에 대한 계약해지를 통보

투자자의 국내 상장주식 순매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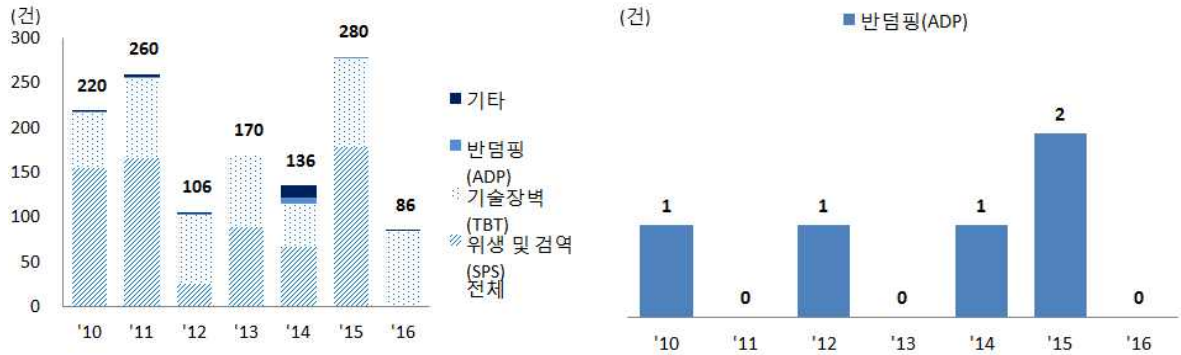
: 한국 금융감독원

□ 비관세장벽 확대

○ '16년 들어 중국이 한국만을 대상으로 조사를 개시하거나 조치를 시행한 비관세조치(NTMs, Non Tariff Measures)는 0건으로 경제보복 행위로 비관세조치는 아직 확인된 바 없음

- 중국의 비관세장벽 중 한국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는 '16년 86건이지만, 모두 특정 국가를 겨냥한 것이 아닌 제품기준으로 부과한 조치
- '16년 제품 기준이 아닌 한국 지정해서 부과한 조치는 0건

영향을 미치는 중국의 NTMs **한국에만 부과하는 중국의 NTMs**



: 조사개시(initiation), 시행중(in-force) 포함, 철회(withdrawal) 제외, 자료 : WTO/I-TIP

[참고1] 비관세장벽=비관세조치(NTMs, Non Tariff Measures)

□ 비관세장벽이란?

○ 현재 비관세장벽에 대한 일반적인 정의는 존재하지 않으며, 학자, 국가, 국제기구에 따라 비관세 장벽의 정의와 범위는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

- 문자 그대로 정의할 경우 관세를 포함한 모든 무역관련 장벽을 의미하며 최근 그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

□ 비관세장벽의 활성화 배경

○ GATT체제에서 관세를 이용한 보호무역조치의 여지가 축소됨
○ 수입억제와 산업보호를 직접 겨냥하여 관세보다 더 효과적인 수단
○ 명시적인 확인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상대국의 반발과 보복회피에 용이

□ 비관세장벽 분류(규제대상 기준)

○ (수량규제) 수입할당제, 수출자율규제, 시장질서협정, 다자섬유협정
○ (가격규제) 수입과징금, 수입예치금, 최저수입가격제, 반덤핑관세, 상계관세
○ (행정절차) 수입허가, 통관절차, 영사수속, 원산지증명
○ (품질표준) 위생·검역, 포장·용기규정, 공정·규격표준, 형식기준
○ (정부개입) 정부조달, 국가무역, 각종 보조금 지원

Ⅱ 일본사례 분석

□ 중국정부의 보복조치와 反韓감정 확산이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가늠해 보기 위해 과거 中·日간 영토분쟁 시기 일본이 입은 경제적 손실을 먼저 검토해볼 필요

□ 과거 中·日간 영토분쟁 과열로 중국의 反日감정이 격화되자 중국이 일본에 일방적인 경제보복을 가한 적이 있음

○ 센카쿠 열도(중국명 : 다오위다오)는 일본이 실효지배중인 무인도로 ’10년 이후 영토분쟁이 두 차례 첨예하게 부각

- (1차 분쟁) ’10.9.7일 일본 해상순시선이 이 섬 주변에서 조업중이던 중국어부들을 체포하면서 센카쿠열도를 둘러싼 갈등이 점화
- 중국이 경제보복으로 일본에 희토류 수출을 중단하자, 일본이 체포한 선원들을 중국에 양도하며 사건이 일단락
- (2차 분쟁) ’12.9.11일 일본정부가 민간 소유이던 센카쿠 열도를 국유화하자 反日감정이 최고조에 달함

□ (반일감정) 폭력시위 등으로 중국에 진출해 있는 일본기업들의 직접적인 피해 사례가 속출

○ (1차 영토분쟁) 중국내 반일감정이 확대되며 일본산 제품 불매운동 확산

○ (2차 영토분쟁) 중국내 반일감정이 최고조*에 달하며 일본기업들의 기물파손 및 영업중지 등 직접적 피해사례도 속출

* “개와 일본인은 출입금지”라는 간판까지 등장

- ’12.9.16일 일요일 전국적으로 대규모 폭력시위가 발생하면서 일본계 기업들은 직접적 금전피해가 발생했고 일본산 불매운동도 확산
- 거센 반일시위에 일본산 자동차 등 파손이 잇다르자 일본기업들은 차주에게 파손배상이라는 1차적인 피해와 파손우려에 따른 판매부진이라는 2차 피해를 겪음

- 중국내 폭력시위 때문에 일본계 기업들은 임시휴업, 임직원 대피 등으로 대응하며 단기적인 피해도 속출

< 반일 데모에 따른 기업별 피해와 대응 >

회사	일본기업 피해와 대응
도요타	칭다오시 도요타 대리점이 궁중의 방화에 의해 전소
파나소닉	칭다오시 파나소닉 전자부품공장 데모 피해, 방화사건 발생 광둥성 등 3공장을 18일까지 정지하고 전 종업원 자택대기
캐논	디지털 카메라 생산 공장 3개소 17~18일 가동 중단
미즈키전기	칭다오시 전자부품공장 데모에 의해 파괴, 방화사건 발생 18일까지 가동정지, 주해공장도 임시 휴업
라이언	칭다오시 공장 17, 18일 가동 중단
이온(AEON)	일본계 슈퍼인 쟈스코 이오지마 점 17일까지 임시휴업 휴업중 데모 군중이 난입해 기물파손과 약탈 피해
세븐&아이 홀딩스	전국적으로 일본계 편의점과 슈퍼체인 습격 쓰촨성 청두시 이토요카도 5점포 16일까지 임시휴업
헤이와도 (平和党)	백화점 헤이와도 창사점 기물파손과 약탈 피해 후난성 장사시 등 백화점 3점포 18일까지 임시휴업
스미토모화학	광저우 자동차용 합성수지 영업소 18일까지 임시휴업
혼다	중국내 3공장 18~19일 가동 중단
미쓰비시 자동차	후난성 신공장 일본인 사원 자택(호텔) 대기
유니클로	베이징 등 7점포 17일 임시휴업, 일본인 직원 자택대기
미쓰코시이세탄 홀딩스	호남성 백화점 3점포 임시휴업
고세	헤이와도 쇼핑센터 내 상점 파괴, 상품 약탈 피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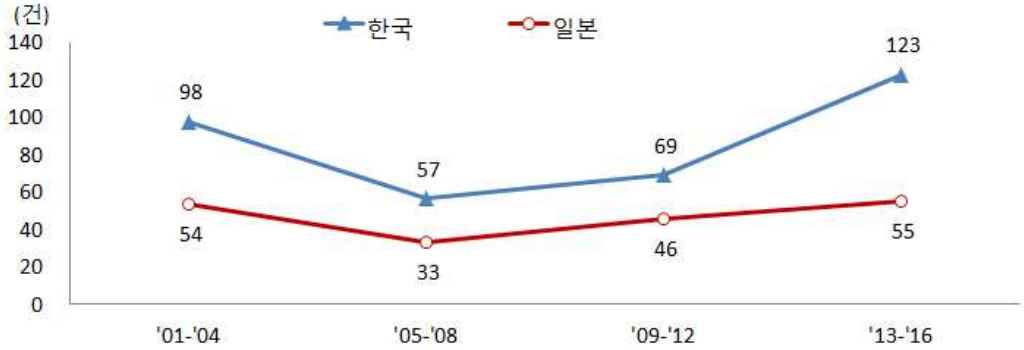
* : 니혼게이자이신문, 아사히신문, Yahoo Japan, KOTRA 후쿠오카 무역관

□ (정부규제) '12년 이후 중국정부는 일본에 대한 비관세조치를 확대

○ 비관세조치는 '08년 금융위기 이후 전세계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이긴 하나, 일본은 한국에 비해 규제건수가 월등히 낮은 수준

- 최근 4년간('13년~'16년) 전세계가 일본(55건)에 부과하는 비관세조치는 한국(123건)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함

비관세조치(NTMs) : 한국 vs 일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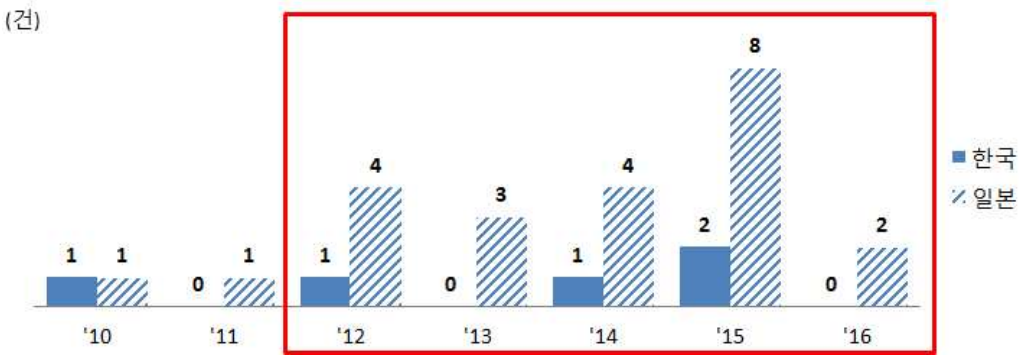
: 조사개시(initiation), 시행중(in-force) 포함, 철회(withdrawal) 제외, 제품기준으로 부과하는 비관세조치를 제외하고 한국과 일본에 한해서 부과하는 조치만 산출, 자료 : WTO/I-TIP

○ 반면, 중국이 일본을 상대로 한 비관세조치 건수는 '12년 센카쿠열도 국유화 이후 급증해 보복조치의 일환으로 추측 가능

- 영토분쟁이 처음 쟁점화된 '10년에는 중국이 희토류 수출을 금지한 바 있으나 일본이 중국선원들을 중국에 양도하며 사건이 일단락되었으며, 비관세조치가 늘어난 증거는 찾기 어려움

○ 중국은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비관세조치를 가하고 있지 않지만, 한중관계 개선이 요원하다면 이 단계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높음

2010년 이후 중국이 부과하는 비관세조치(NTMs) : 한국 vs 일본



주 : 조사개시(initiation), 시행중(in-force) 포함, 철회(withdrawal) 제외, 제품기준으로 부과하는 비관세조치를 제외하고 한국과 일본에 한해서 부과하는 조치만 산출, 자료 : WTO/I-TIP

□ (수출) 反日감정에 정부의 수입규제까지 더해져 對중국 수출이 둔화

○ '11년부터 對중국 수출물량이 다른 국가에 비해 크게 감소되기 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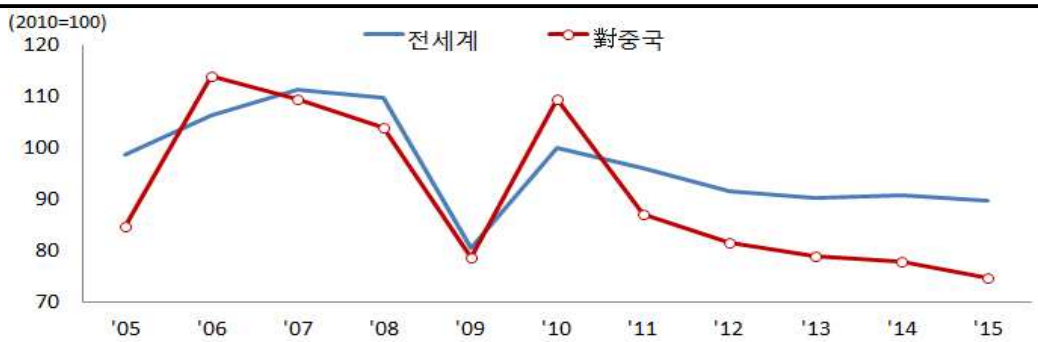
※ 수출물량증가율(%) : △3.8('11) → △4.8('12) → △1.4('13) → 0.6('14) → △1.0('15)

※ 對중국물량증가율(%) : △20.6('11) → △6.4('12) → △3.1('13) → △1.2('14) → △4.0('15)

○ 본격적인 수입규제 전인 '11년부터 수출이 감소한 것으로 보아 중국인들의 반일감정 확대가 수출에도 악영향을 미쳤을 가능성

⇒ '12년까지 중국의 수입 1위국이던 일본이 '13년 2위 '15년 4위까지 하락

수출물량지수 : 전세계 vs 중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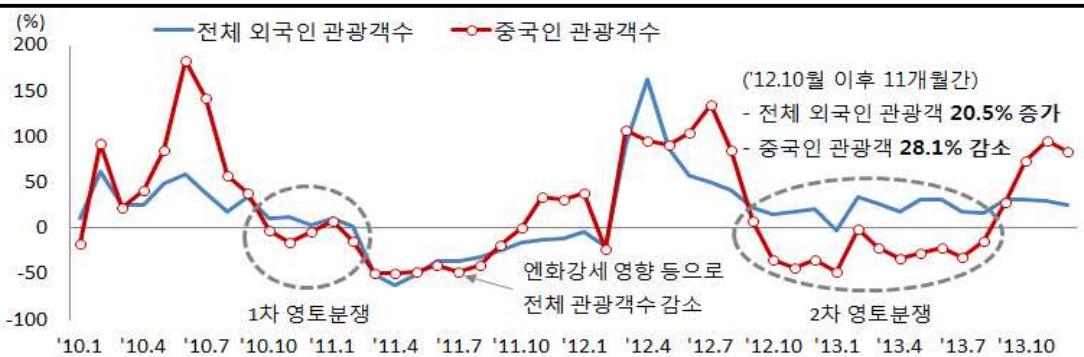
: 일본수출(금액)은 엔화기준으로 표기하나 과거 10년간 엔/달러 환율변동이 커서 가격효과에 의한 바이어스를 제거하기 위해 물량지수로 수출을 비교함, 자료 : 일본재무성

□ (관광) 2차 영토분쟁('12.9월) 이후 약 1년간 중국인 관광객수 급감

○ 센카쿠 열도 국유화로 반일감정이 최고조에 달하자 訪日 외국인 관광객수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인 관광객은 11개월 연속 감소

- 1차 영토분쟁 직후에도 3개월간 방일 관광객수가 감소했으나 엔화강세 영향으로 외국인 일본방문이 전반적으로 줄어든 시기였던 점을 감안하면 양국간 갈등 초기에는 영향이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임

일본을 방문하는 관광객수 증가율



주 : 전년동월대비, 자료 : 일본정부관광국

Ⅲ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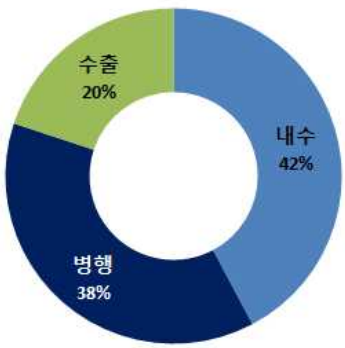
□ 중국의 反韓감정이 확산된다면, 일본의 사례처럼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 우리기업의 對중국 수출, 관광산업 등이 직접적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높음

○ 우리나라는 일본에 비해 중국에 대한 경제의존도가 높은 편이어서 중국의 경제보복에 일본보다 더 큰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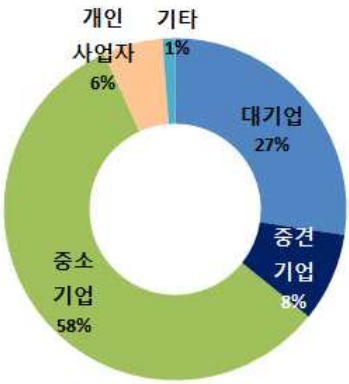
□ (진출기업) 현재 중국에 진출한 기업의 총수는 3,582개이며 내수를 목적으로 진출한 기업이 많아 反韓감정에 직접적 영향을 받을 우려

○ 모기업 규모별로도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비중이 높아 중국의 경제보복을 견뎌낼 체력이 부족할 우려

진출기업 비중



모기업 규모별 진출기업 비중



: KOTRA(2014)년 자료를 기초로 인천발전연구원 작성(2016.1월)

□ (수출) 우리나라는 수출에 대한 경제성장 의존도(45.9%)가 높고 특히 중국에 대한 교역의존도(26.0%)가 높아 대중국 수출 둔화가 경제에 미치는 파급력은 일본에 비해 훨씬 클 전망

< 한국과 일본에서 중국과의 무역마찰이 가지는 의미(%) >

	GDP 대비 수출 비중		전체 수출 대비 對중국 수출 비중	
	한국	일본	한국	일본
'12	56.3	14.7	24.5	18.1
'13	53.9	16.2	26.1	18.1
'14	50.3	17.7	25.4	18.3
'15	45.9	17.9	26.0	17.5

자료 : World Bank, 한국관세청, 일본재무성

□ (관광) 우리나라는 중국인 관광객 비중이 절반(45.2%)에 가까워 反韓 감정이 심화될 경우 관광산업도 일본보다 더 큰 타격을 입을 우려

○ 일본의 사례와 같이 관광객 감소가 1년 정도 지속된다면 수십억 달러의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

- '15년 메르스 파동 때는 3~4개월 여파가 지속된 것만으로 전년대비 15억달러 관광수입이 감소한 바 있음

< 일본을 방문하는 관광객수와 관광수입(, 억달러) >

	관광객수(중국인 비중)		총관광수입	
	한국	일본	한국	일본
'12	1,114(25.5%)	836(17.1%)	133.6	145.8
'13	1,218(35.5%)	1,036(12.7%)	145.2	150.9
'14	1,420(43.1%)	1,341(18.0%)	177.1	188.5
'15	1,323(45.2%)	1,974(25.3%)	151.8	249.7

: 한국관광공사, 일본정부관광국

○ 특히 면세점의 경우 전체 매출(106억달러)의 72%를 외국인에 의존하고 있고 외국인 매출(76억달러)의 대부분이 중국인으로 손실이 불가피

- 우리나라 4대 면세점 기준으로 중국인 관광객 매출액(5.0조원)은 전체(8.1조원)의 62% 이상, 외국인 관광객(5.8조원)의 86%를 차지

< 4대 면세점 등 매출액(2015년 기준, 억원) >

	내국인	중국인	기타외국인	전체
호텔롯데	13,487	29,447	4,556	47,491
호텔신라	7,221	16,155	2,512	25,888
워커힐	467	2,254	154	2,874
동화면세점	479	2,246	501	3,226
한국관광공사	659	251	200	1,110
합계	22,313	50,353	7,923	80,589
비중	27.7%	62.5%	9.8%	100%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국회 정무위원회 제윤경 의원실(더불어 민주당) 재인용

□ (종합) 수출과 관광·콘텐츠 산업만 보면 중국에 대한 경제노출 정도는 GDP의 7.8% 수준

○ 우리나라 '15년 GDP는 1,558.6조원(1조 3,775억달러)로 수출과 관광·콘텐츠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GDP대비 27.4%, 이중 중국에 대한 경제노출은 GDP대비 7.8% 수준

- GDP 대비 노출 비중은 수출과 각 산업의 부가가치를 기준으로 산출

< 및 주요 산업의 경제 노출 규모(2015 기준, 단위 : 억달러) >

		상품수출	관광	콘텐츠**	계
전체	(수출/산업) 부가가치	3,182.0	248.0	349.9	3,779.9
	% of GDP	23.1%	1.8%	2.5%	27.4%
전체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		26.0%	62.5%	26.2%	-
중국	(수출/산업) 부가가치	827.3	155.0	91.7	1,074.0
	% of GDP	6.0%	1.1%	0.7%	**7.8%**

* 비중은 상품수출은 수출액 기준, 관광산업은 면세점 매출액 기준, 콘텐츠산업은 수출액기준으로 작성,
** 콘텐츠산업의 경우 국가별 수출비중과 부가가치율은 '14년 기준을 이용
자료 : 부가가치 산출은 수출은 무역협회, 관광산업은 WTCC(World Travel & Tourism Council), 콘텐츠 산업은 한국콘텐츠진흥원 산출금액을 인용

□ (영향) 아직 중국의 경제보복의 영향이 가시화되지 않았지만, 중국의 경제보복이 본격화되면 경제적인 손실은 감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

○ 일본의 사례를 참고로 시나리오를 분석한 결과, 수출과 관광·콘텐츠 산업이 타격을 받으면 한국의 경제성장에 **0.59%p~1.07%p*** 감소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수출감소에 따른 수입 감소 등 다른 영향은 제외

- (시나리오 1) 상품수출 5%, 관광객 20%, 콘텐츠 부가가치 10% 감소
- (시나리오 2) 상품수출 10%, 관광객 30%, 콘텐츠 부가가치 20% 감소

< 시나리오별 중국의 경제보복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단위 : 억달러) >

		상품수출	관광	콘텐츠	전체
시나리오 1 (Bad)	부가가치	41.4↓	31.0↓	9.2↓	76.9↓
	GDP 기여도	0.30%p↓	0.23%p↓	0.07%p↓	**0.59%p↓**
시나리오 2 (Worst)	부가가치	82.7↓	46.5↓	18.3↓	147.6↓
	GDP 기여도	0.60%p↓	0.34%p↓	0.13%p↓	**1.07%p↓**

□ **위의 산업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 외에도 고용창출, 신규투자, 연관 산업의 부가가치 감소까지 범위를 확장하면 그 영향은 더욱 커질 전망**

○ 중국의 경제보복으로 수출과 관광·콘텐츠 산업이 위축되면, 고용 및 투자가 줄어들어 궁극적으로 민간소비도 위축될 가능성

○ 中·日 관계 악화로 얻은 반사이익*(중국의 '12년 수입 2위국에서 '13년 1위국으로 도약)에 대한 기저효과까지 감안하면 그 영향은 더 클 전망

* 당시 중국기업들은 일본으로부터 수입품을 반환하고 한국·대만 기업 등으로 변경

□ **블룸버그 또한 우리나라의 對중국 수출에 차질이 생길 경우 한국경제가 큰 타격 받을 것이라고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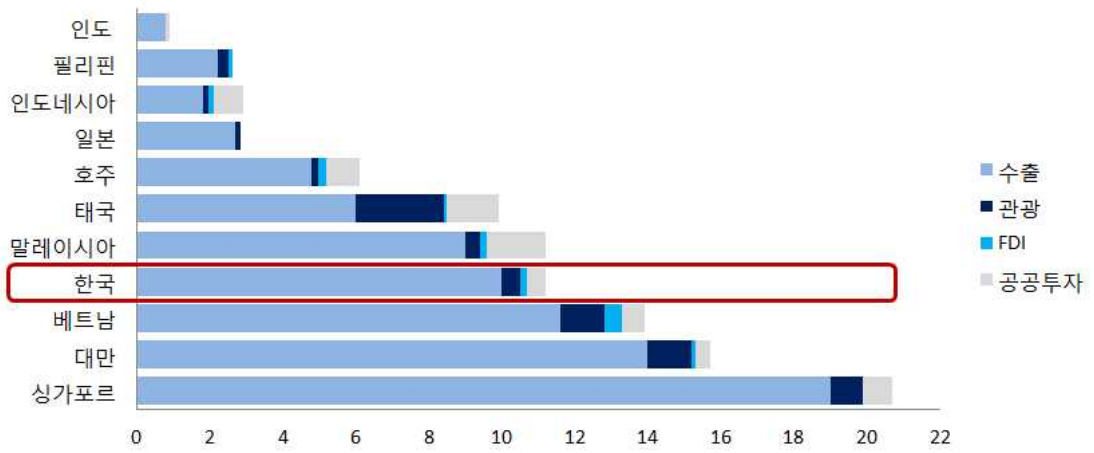
○ 프랑스계 한 IB의 분석('16.8.4일)에 따르면 한국은 싱가포르, 대만, 베트남에 이어 아시아에서 4번째로 중국에 영향을 크게 받는 국가로 중국의 보호무역이나, 긴축정책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남

- 한국경제가 중국경제에 노출되어 있는 비중은 **GDP의 11%**에 달해 한국이 중국의 경제보복을 견디기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

○ 블룸버그는 글로벌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경제보복은 한국경제에 치명적 타격이 될 것이라고 재차 강조

- 중국은 경제보복으로 이미 세관검사를 강화하고 까다로운 증명서를 요구하며 관료주의적 장애물을 동원중이라고 경고

국가별 중국경제 노출 순위(% of GDP)



: '16.8.4일 'Who is Most Dependent on China?' 블룸버그 기사 중 Alicia Garcia Herrero 이코노미스트 분석 인용